KCCI 브리프_ESG_제22호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2월

전문가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에 기대기보다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주요 이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

ESG 동향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에 기대기보다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이지윤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화두로 급부상했다.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그리고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ESG 이슈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이 ESG팀을 구성하고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ESG 경영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SG 경영이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자리 잡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ESG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감에 기대기보다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동향에 맞춰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신경을 쓸 수 있으나, 이가 기업가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중단되거나 ESG워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게 중요한 대표적인 유인은 자본조달비용이다. 최근 사회책임투자(SRI)를 강조하는 투자자가 급증하였다. 또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ESG 중 특히 환경부문이 자본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소배출도가 높은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으며 자기자본조달비용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현상은 2015년 이후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ESG 요소들이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준다면 ESG 경영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ESG와 연계된 대출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런 지속가능금융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경제주체,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도 적절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SG 성과가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유인의 마련도 필요하다.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활동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채용이 그 예일 것이다. 이런 영역은 기업에게 비용적 부담이 될 것이나 기업의 역할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경제주체의 의식 변화로 이런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유인이 제공되어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런 영역을 규제로 통제하면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가 꺾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이런 활동을 ESG경영의 일환이라기보다 규제준수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규제보다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SG 경영의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문 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시장메커니즘 기반 제도이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한 뒤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여, 온실가스배출 저감비용이 높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 비용이 낮은 기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런 규제와 별개로 민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도 존재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사회부문 중 측정과 계량화가 가능한 영역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처럼 사회적 약자 채용을 거래하거나,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처럼 약자채용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시장의 고안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의 경우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데, 이런 규제의 비효율성 개선에도 시장기반의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을 위해서는 ESG 성과의 측정 및 계량화가 요구된다. 현재에는 기업마다 ESG 활동의 공개 여부와 그 방법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 기업간 비교가능한 ESG 정보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2025년부터 점차적으로 의무화될 ESG 공시제도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주요 이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

민경희 연구위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및 중장기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가 요구되는 수준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탄소 전환 초기일수록 공공부문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①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

일반적으로 국가의 재정이나 정책금융과 같은 공공 금융부문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국가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워 자금 조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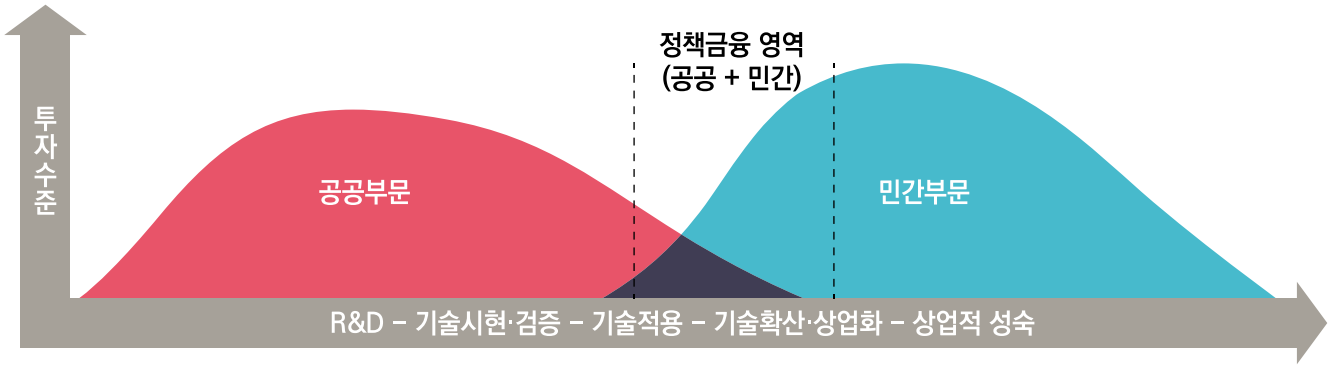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장기적인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리스크가 큰 분야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선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선도하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Mazzucato, 2013 · 2018)

이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설계하는 정부의 역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자금의 공급과 투자, 민간자본 유인 등을 포괄하는 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수단과 지원 분야 등이 점차 다양화되는 등 기후금융 메커니즘이 점차 성숙화되고 있는 추세다.

② 주요국의 공공 기후금융 미국-그린뱅크

미국에서 추진 · 설립되어 있는 그린뱅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09년 그린뱅크 설립을 지원하는 그린 캐피탈 연합(Coalition for Green Capital)을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8개 주에 그린뱅크가 설립되었다.

정책금융의 지원 영역



자료: 산업은행(2017), Kennan(2014)

그린뱅크의 재원은 미국 각 주의 배출권거래제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한 수익과, 지역 내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연구 · 개발 관련 펀드 자금 등을 활용해 조달한다.

코네티컷주의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매년 500만~1,000만달러, 전기요금 수입으로 3천만달러를 조달하며, 이를 통해 '11년 설립 이후 '19년까지 투자 1달러 당 약 7.4달러의 민간투자를 유인했다. 뉴욕주의 경우 '13년 그린뱅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인 13억 달러를 투자했다('21.3월 기준). 재원은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수입 일부를 청정에너지펀드를 통해 조달하며, 태양광 프로젝트,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분야에 약 23억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인했다.

영국-녹색투자은행(GIB)

영국은 '12년 친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은행(Green Investment Bank, GIB)'을 설립하였다. GIB는 "가능한 한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것"을 투자 원칙으로 삼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상업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온 사례로 볼 수 있다.

GIB는 설립 초기 100% 정부출자금으로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친환경 분야별 전문인력들이 프로젝트의 발굴과 투자를 담당함으로써 높은 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경험이 축적되었다. 그 결과 GIB의 투자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저탄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유럽투자은행(EIB)

EU의 정책금융기관인 EIB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19년부터 EU의 '기후은행(climate bank)' 으로 기능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EIB는 '21~'30년 동안 1조 유로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주로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공정전환 관련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EU 국가들의 지원금과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국내 공공부문도 그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 단계별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글로벌 경제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에도, 저탄소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는 한편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해외 주요 공공 기후금융 재원조달 방식 및 투자분야

	재원조달	투자분야
미국 그린뱅크	- 배출권 경매 수입, 기후 · 환경 관련 공과금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EERS) 위반 페널티	- 태양광,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저장
영국 녹색투자그룹[1]	- 정부 자산(고속철도 운영권) 매각 - 펀드, 자산 등에 대한 투자 수익	- 육상풍력 발전,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 등
EU EIB	- EU 회원국 지원금, 녹색채권 발행	- 저탄소 운송,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등

주: 1) 2017년 '녹색투자은행(GIB)'이 맥쿼리 그룹에 인수되면서 '녹색투자그룹(Green Investment Group, GIG)'으로 명칭 변경
자료 : 산업은행, 각 기관 홈페이지 등

ESG 동향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한주연 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12월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이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을 제작 · 발표하였는데, 이는 EU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기업의 ESG 리스크 실사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 · 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21년 12월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이 상장 대기업에게만 활용 가능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22년 2월 EU 의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 제 · 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통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Apple, Ford Motors,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은 ① 기초 진단 항목, ② 심화 진단 항목, ③ ESG 업무표준 매뉴얼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① 기초 진단 항목은 공급망 ESG 진단 · 실사 지표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 있거나 ESG 경영 도입에 기초가 되는 지표 및 국제표준과 연계된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② 심화 진단 항목은 산업별 이니셔티브 등 공급망 진단 · 실사 지표를 종합하고, ESG 경영 정착 및 확산에 활용되는 지표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③ ESG 업무표준 매뉴얼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부서별 역할, 외부의 ESG 정보 요구 유형 및 대응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 · 중견기업에서는 공급망 ESG 평가 대응 및 ESG 경영체계 구축, 대기업에서는 공급망 ESG 평가체계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 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 · 중견기업 등에게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주요 진단항목	
정보공시 (P)	정보공시 형식(방식, 주기, 범위, 검증 등)
환경 (E)	환경경영 추진체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사회 (S)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여성 구성원 비율, 근무시간 준수, 안전보건 추진체계 등
지배구조 (G)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공익 제보자 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등

ESG 업무표준 매뉴얼	
실행조직 구성	거버넌스 구축, 전담조직 설치, 유관부서 지정
고객사 요청 대응	요청사항 조사 및 취합 · 관리, 분석 및 답변작성 등
자본시장 요청 대응	투자기관 파악, 요청현황 조사
평가기관 대응	평가제도 선정, 평가지표 분석, 평가답변 제출 등
정보공시	중요이슈 선정, 데이터 수집, 정보작성 및 검증 등
중장기 전략 수립	외부환경 분석, 내부현안 분석, 전략 설계
전략과제 관리	과제협의, 과제이행 및 모니터링
대외 동향 모니터링	법/제도, 산업계, 서비스기관, 미디어 및 이해관계자 동향

ESG 통계 지표

2023년 1월 31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녹색채권	162	172	183	186	188	199	203	201	200	212	212	213
사회적채권	820	835	871	912	946	966	1,006	1,032	1,045	1,069	1,070	1,083
지속가능채권	233	237	246	279	304	305	309	308	309	300	299	298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 천억 원)

	'22.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녹색채권	168	173	183	185	186	191	194	193	193	200	200	201
사회적채권	1,306	1,331	1,362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1,572	1,565
지속가능채권	181	182	186	199	213	217	220	219	218	213	213	213

2. ESG 평가

ESG 종합 등급 부여 현황(KCGS 등급자료 기준)

(단위 : 개사)

구분		S	A+	A	B+	B	C	D	합계
기업수	'22	-	5	117	125	75	195	256	773
	'21	-	12	170	134	209	225	12	762
	'20	-	16	92	133	257	235	22	755

3. 기타 통계

사회적기업* 일자리 통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기업수	2,435	2,777	3,215	3,534
총 고용수	49,063	55,407	63,034	66,917
취약계층 고용수	30,073	33,206	38,597	40,583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2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	8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과 활용방안
3월	지속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9월	탄소중립 분야 국가 R&D 현황 및 과제
4월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10월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개선과제
5월	RE100 추진 현황과 과제	11월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6월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12월	UN기후변화협약 결과와 의미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금융의 역할

민경희 연구위원

T. (02)6050-3137 | E. kmin@korcham.net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한주연 연구원

T. (02)6050-3143 | E. jooyeon@korcham.net

ESG 통계 지표

박현준 연구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